KODIT Research

논 고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노 용 환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2. 경제위기시 공적 중소기업 금융의 필요성
3.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4. 경기변동에 대응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

* 본 내용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 약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확대로 인한 경기변동 심화에 대한 공적금융의 역할로써 불황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경기대응적 정책'(countercyclical policy)의 중요성을 모색해 보았다.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은행이 BIS 비율 유지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축소함으로써 경기하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금융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기순응적 중소기업대출 축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금융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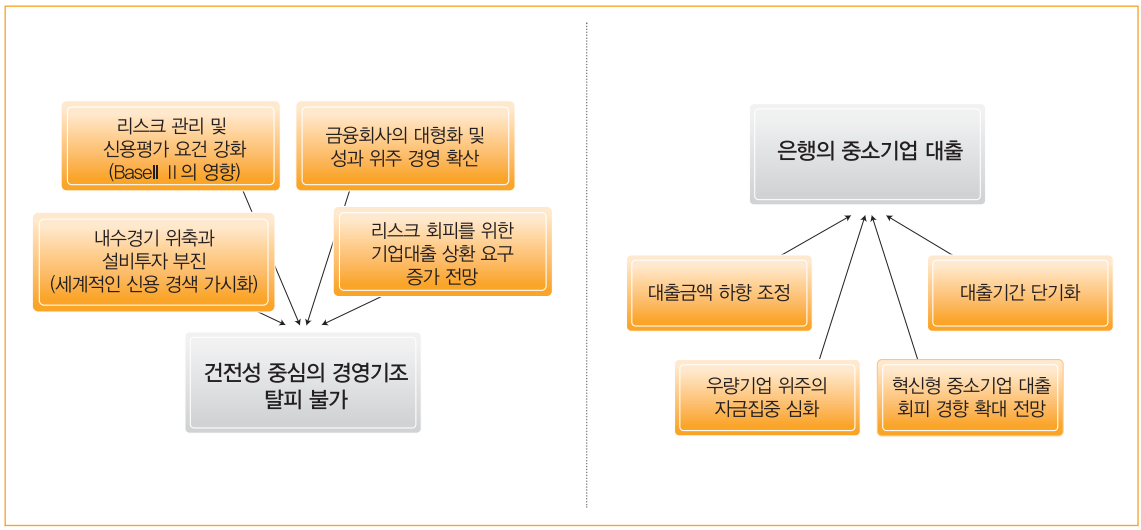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302만여 개소)의 99.9%, 종사자 수(1,088만여명)의 87.5%, 그리고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통계청, 2007) 중소기업은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가경제 발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표 1〉은 중소제조업체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를 보여주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가가치율 · 설비투자효율 · 노동소득분배율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의 금융안전성이 낮은 것인가?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그림 1〉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 1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지표 비교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	36.5	36.5	37.6	37.7	39.6	40.8
		대기업	33.2	43.7	46.8	52.2	53.7	53.9
	부채비율	중소기업	173.7	173.7	166.2	165.1	152.5	145.4
		대기업	201.6	128.9	113.5	91.7	86.1	85.5
	차입금의존도	중소기업	31.8	35.0	35.6	34.4	34.1	34.3
		대기업	42.0	31.2	25.9	20.4	19.1	18.1
생산성	부가가치율	중소기업	25.90	25.40	25.59	25.20	25.78	24.50
		대기업	18.28	22.29	22.00	24.39	22.03	20.98
	설비투자효율	중소기업	75.08	72.40	73.97	76.08	76.37	73.04
		대기업	36.73	49.31	52.67	68.45	62.60	60.66
	노동소득분배율	중소기업	63.84	63.49	65.25	64.50	62.92	62.80
		대기업	46.11	39.70	40.43	34.95	37.62	39.35

자료: 한국은행(2008), 중소기업중앙회(2008a, 2008b)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은행의 현실적 한계와 중소기업금융 경영기조



먼저 중소기업의 금융안전성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대출상환 능력 등 측면에서 은행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담보능력도 부족하여 대기업과의 금융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공개되는 재무정보의 양적 · 질적인 수준이 낮아 자금공급자가 기업신용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적은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가 초래된다. 특히 업력이 낮은 창업기업이나 초기단계의 기업일수록 은행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인 채권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의한 자금조달보다는 외부조달 자금차입원으로 은행 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008년말 기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및 주식 발행실적은 대기업(29조 7,753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3조 1,145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표 2 중소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1-2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주식	기업공개	60	8,939	40	5,927	4	189	△81.1
		유상증자	274	37,170	188	23,618	19	1,757	△56.3
		소 계	334	46,109	228	28,645	23	1,946	△61.3
	일반회사채		66	7,643	31	2,490	5	582	204.7
	계		400	53,752	259	31,145	28	2,528	△51.5
대기업	주식	기업공개	8	14,083	2	2,141	–	–	–
		유상증자	63	112,384	39	20,015	3	3,825	355.4
		소계	71	126,467	41	22,156	3	3,825	355.4
	일반회사채		329	215,230	294	275,597	119	125,252	251.8
	계		400	341,697	335	297,753	122	129,077	2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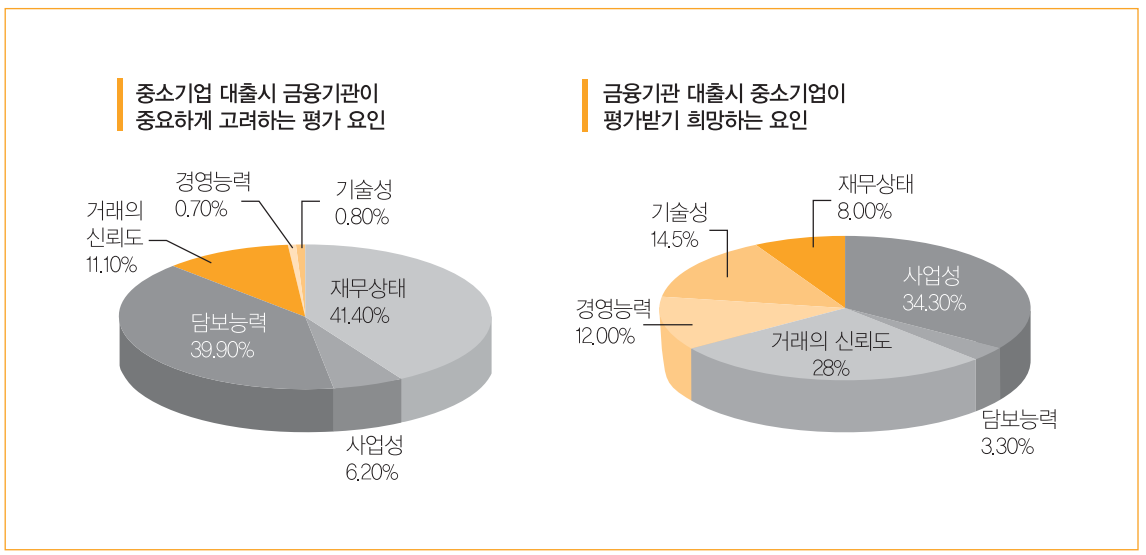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한편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는 경우 단기대출 비중이 높고 담보를 선호하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대출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취약하다. 중소기업대출 중 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 비율은 69.8%(2007년 9월 기준)에 이르고(김동환, 2008), 금융기관은 대출 시 부동산담보 대출을 선호하며(2007년말 기준 원화대출금의 부동산 담보비중은 51%),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에 대해 더욱 심화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2007)에 따르면 금융비용 대 총비용 비율로 측정한 지표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4%에 이르나 1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5%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금융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업력 5년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업은 물론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대 · 중소기업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행 중소기업 대출시장이 공급자 주도형 시장으로 되어 있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유망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그림 2〉는 여전히 금융기관(자금공급자)이 중소기업 대출심사시 자금수요자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성 · 기술성 · 경

영능력 · 거래신뢰도보다는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담보요구와 까다로운 대출심사 및 예금 · 적금 · 보험가입 · 파생상품계약 등 일명 '꺾기' 관행으로 인해 대출금리 이상의 추가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공급자 우위 금융시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조건부로 (옵션거래에 따른 수수료 마진을 얻기 위해) KIKO(Knock In Knock Out)와 같은 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을 판매하여 리스크 회피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위험부담을 전가시킨 것도 중소기업 대출의 공급자 우위시장이 초래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할 수 있다.[1)]

그림 2 공급자 주도형 금융시장 실태



자료: 이종욱 외(2009)

1)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IKO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KIKO 계약에 의한 손실책임이 반드시 은행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KIKO 조건을 조정해 주면서 부금가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꺾기' 행위를 하고, 또한 은행감독 규정이 정한 상품설명 고지의 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적용을 소홀히 한 채 KIKO를 가입 받은 '불완전 판매'를 빈번하게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8.9.29일자)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현재 KIKO로 인해 손실을 당한 중소기업은 모두 540개 업체로 이들이 은행과 맺은 KIKO 계약 거래잔액은 101억 달러에 달하며, KIKO로 인한 기업손실도 1조 4,591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간접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성보다는 건전성과 안정성 위주의 운영체제를 유지해 왔다. 은행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건전성 중심의 경영기조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일정 규모를 갖춘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출기간도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Basel II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 요건이 강화되었고,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성과 위주 경영 확산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금액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 촉발된 세계적인 신용경색의 가시화에 따른 내수경기의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상환 요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량기업 위주의 자금집중화와 창업기업이나 성장성이 큼에도 리스크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회피 경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기반이 되는 자본과 기술축적 수준에 대한 완전한 선별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순환과 무관하게 미래 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와 손익분석에 근거한 대출심사의 일관성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질적으로 은행과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 재무정보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신뢰성이 낮고 비대칭성도 높아 기존의 은행인력으로는 체계적인 신용정보의 구축과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은행이 호황국면에서는 과잉투자를 불황국면에서는 대출축소라는 경기순응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경기침체기에는 중소기업의 부실과 도산, 경기상승기에는 버블을 조장하여 경기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기업에 비해 금융비용 부담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자금수요자이므로 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구조를 단기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출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이같은 '거래형 금융'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하여 재무상태와 담보능력보다는 기업의 사업성 · 기술성 · 경영능력 · 거래신뢰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거래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근거로 은행-기업간 재무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구제금

융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금융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대형화되면서 관계형 대출이 감소하고 양적 신용지표들을 이용한 신용평점평가에 의한 거래형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위험관리형 또는 단기형 대출관계는 장기적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여신에 있어 정책자금이나 공적보증기구를 통한 보증대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불황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은 기업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2009년 1월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은행간 대여금을 제외한) 총원화대출액 대비 중소기업대출금 점유비율(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기준)이 46.1% 수준에 달함을 고려할 때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1997년 촉발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경기회복 속도를 촉진하였던 정책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위기시 공적 중소기업 금융의 필요성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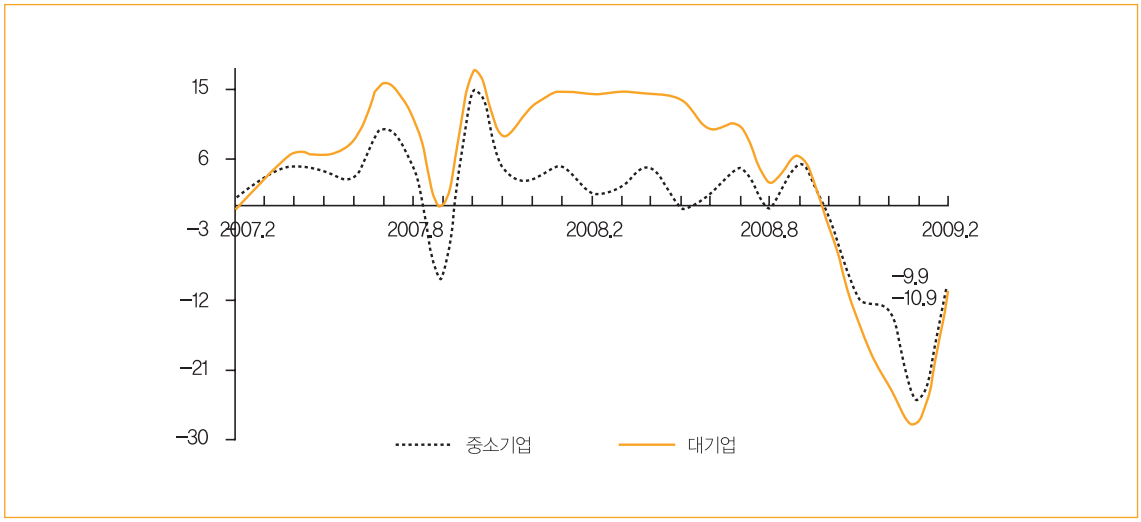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간접금융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져 왔으며 금융상품구조 측면에서도 은행권의 중개기능은 대기업의 탈중개화가 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가계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금융의 비중이나 증가율은 경기변동이나 은행권의 여신정책 변화 등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기능의 안전성은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2007년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초래된 금융위기는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과 함께 금융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동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전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 신용경색 및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global convergence) 심화는 글로벌 규범 및 코드의 통합화 과정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미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 · 자본시장의 개방정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회사들이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이라는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지표의 악화를 초래한다는데 있다.

실제 〈그림 3〉은 우리 경제가 2009년 1/4분기에 실물경기의 하강국면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2월 중 중소제조업의 생산은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 9.9% 감소하였으며,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9년 2월 현재 63.9%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3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금융불안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대되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현금성자산 보유를 늘리는 가운데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구매력 저하로 감소할 전망이며, 설비투자의 경우는 기업의 업황 부진 및 이에 따른 유휴 생산설비 급증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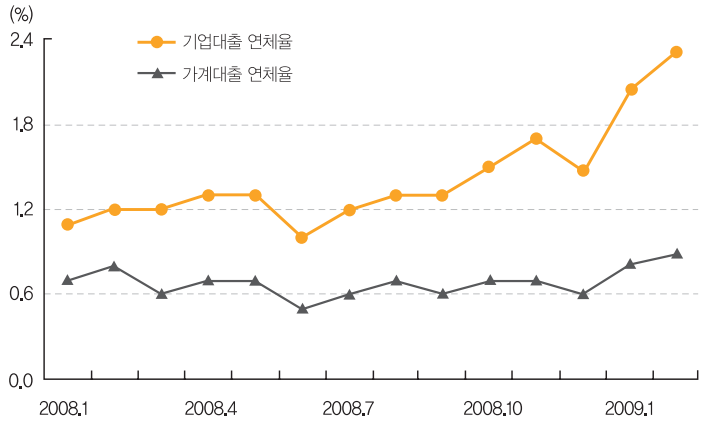
관련 금융경색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교역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결과 결국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이 악화되어 실업증가가 예상된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로 기업의 부실 증가가 우려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부실을 증가시키는 금융위기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실적 저조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증대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어음부도율이나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신용위험 역시 증가하여 자산건전성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자료기준)이 정책자금(24.8%)을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대출(71.9%)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경기하강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림 4 시중은행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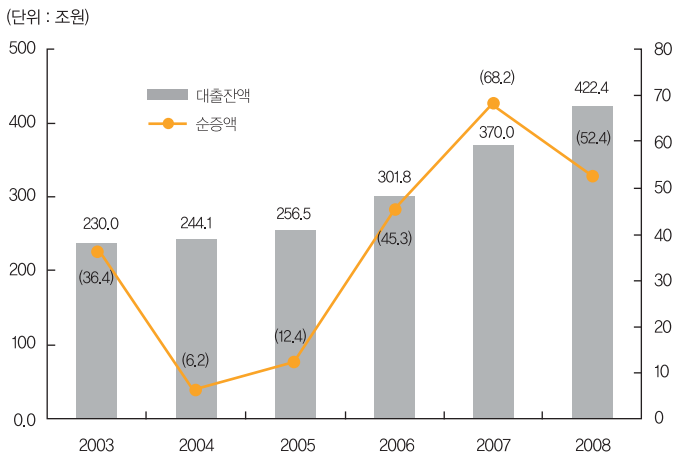
따라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색과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금차입 환경의 악화로 당장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실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이것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초래하고 가계 및 타 기업부문의 부실 증가가 우려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부실의 원인이 되는 등 금융위기 악순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3) 은행의 자발적 중소기업지원 인센티브 결여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 강화와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직접금융을 위주로 은행 이탈이 심화되면서 은행은 가계와 우량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을 강화하였다. 2009년 1월 현재 전체 예금은행의 (은행간 대여금을 제외한) 총원화대출액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46.1% 수준으로 가계대출비중(42.0%)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자금대출의 82.4%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은행의 역할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과 보증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적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결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2003년도에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그림 5〉에서 보듯이 2004-2005년 기간 중 감소하였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5년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은 전년대비 12.4조원에 불과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억제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업 ·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2006년에 45.3조, 2007년에는 68.2조까지 급증하였다가 2008년에 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9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증확대, 대출 만기연장 등 정부의 적극적 금융정책에 힘입어 월평균 3.3조원 순증규모로 다소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5 중소기업 대출잔액 추이 (2003-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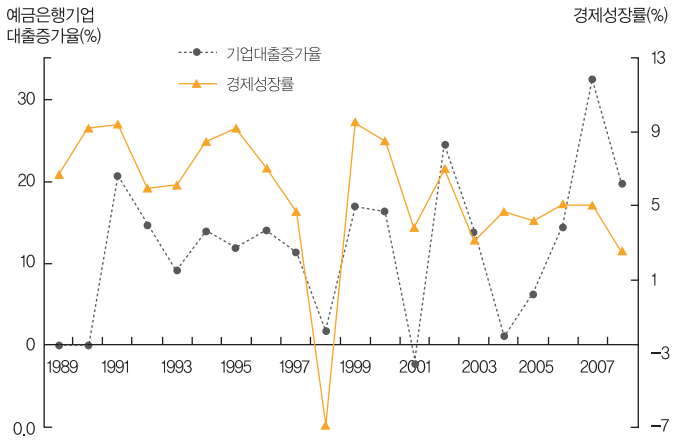
주: 1) 국내 18개 은행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연말기준

2) 2008년의 실질 지원실적 순증규모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한 특별예대상계(0.9조원), 최근 3년치 평균 이상의 부실채권 상각 · 매각액(1.2조원) 등을 포함할 경우 54.7조원 규모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1)에 근거하여 재구성

은행은 직접금융 접근성이 제한적인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시 자산건전성 악화와 BIS 비율 하락으로 자발적인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 〈그림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경기침체기에 대출금 회수, 대출요건 강화 및 대출금 축소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대출을 축소하고 호경기에는 반대로 대출을 증가하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인다. 경기둔화시 기업이 가계보다 대출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업대출 관련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대출은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6 경제성장률과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율 추이 (1991-2008년)



(4) 불황기 공적 중소기업금융의 역할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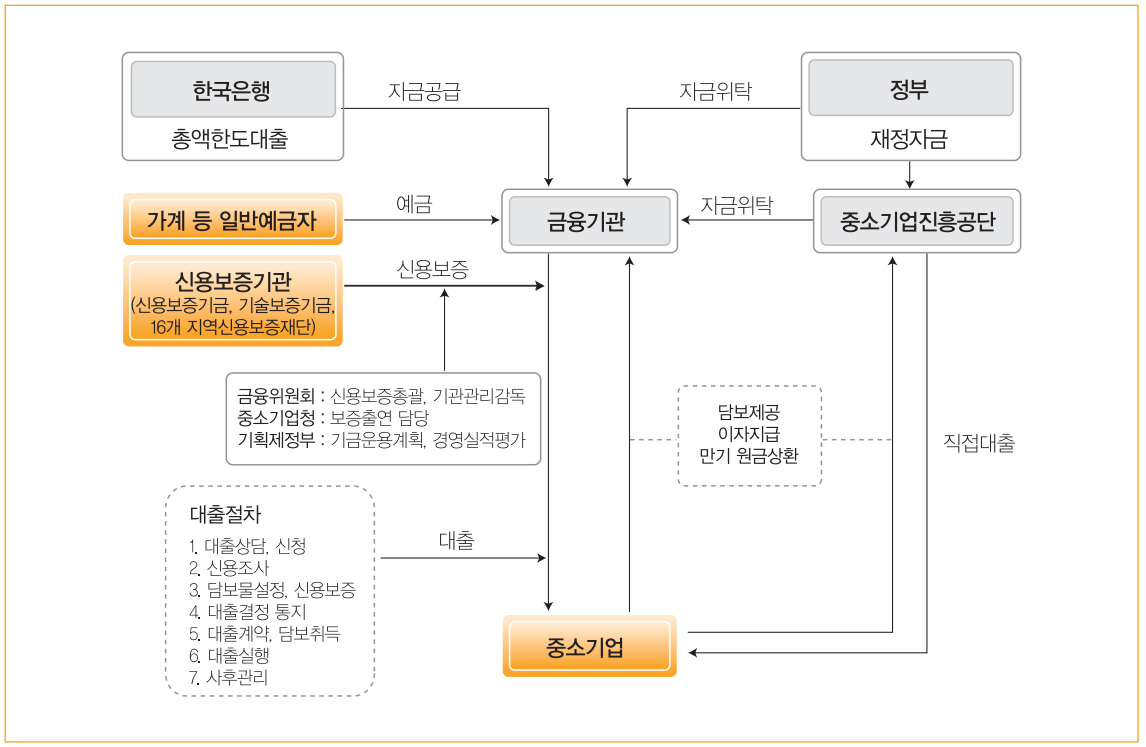
불황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은 기업부실과 동시에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황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완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미래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장실패의 보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기본법」(1966.12제정) '금융 및 세제 조치' 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미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 이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으며,[2] 이후 중소기업 자금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제도를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는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한 제도(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3] 및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정부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7〉은 공적부문을 통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중소기업 정책기금 및 예산을 통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전담 특수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정책인 총액한도대출제도, 그리고 신용보증제도 등 자금 흐름의 원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정부 · 한국은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자금신청기관이 자금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취급기관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그림 7 공적부문을 통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3)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한 '의무대출비율제도'(1965년 4월 시행)는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기업은행 70%, 외은국내지점 3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동 비율 미준수로 자금중개기능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있으며,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두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 중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김현욱, 2005), 한국은행이나 특수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증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더욱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은행의 상업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시장중심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총액한도대출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출중소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토대로 총액한도 내에서 은행별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2009년 3월 현재 연 1.25%)로 저리자금을 배정 ·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4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다. 총액한도는 1994년 3월 8.8조원에서 1997년 2월 3.6조원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01년 10월 11.6조원으로 정점에 이른 뒤 다시 축소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불안 및 KIKO로 인한 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다시 확대하여 2009년 3월 현재 10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금리 면에서 크게 유리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이 높은 은행에 총액한도 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행에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

나. 정책자금 지원제도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중소기업금융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촉진 등을 위해 정부가 예산 · 기금 등을 원천으로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 출연 · 출자 ·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협의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 다양한데, 이 중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금융기관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정책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규 정책자금 신설 등으로 정책자금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2003-2008년 기간 중 약 11.9만개의 중소기업에 총 17조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였고, 특히 경기불황 조짐의 가시화로 2008년도 정책자금규모(3.2조원)는 2007년도(2.8조원)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시중 유동성 부족에 따라 비재무 평가로 융자를 결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전용자금(4천억원)의 신설운영, 소상공인 자금의 부동산중개업 등 생계형 업종에의 지원 계획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4.3조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다.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는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이다. 신용보증제도는 그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년도의 보증규모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요와 금융환경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공적보증기관을 통해 은행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보증기관으로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수출기업 등 일반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1976년 설립),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1989년 설립),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재단, 1999년 설립)이 있다.

이 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운용의 기본구조는 정부(중소기업청)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기관(보증인)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된 중소기업(채무자)에게 제도권 금융기관(채권자)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3자 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로 되어 있다.

3.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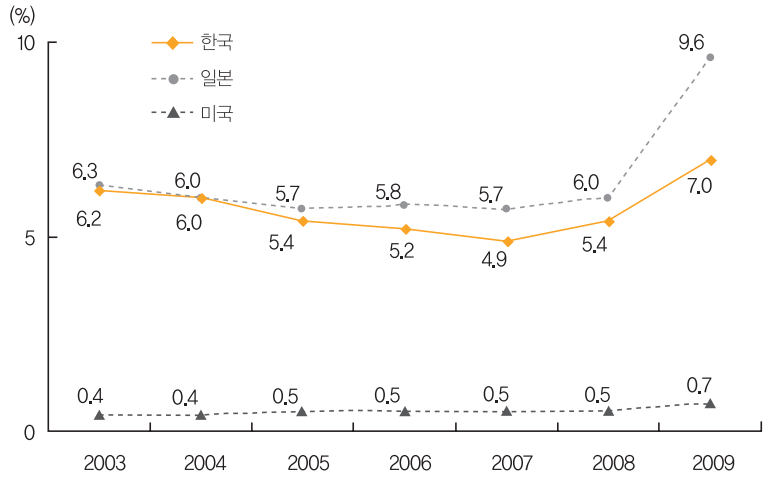
(1) 신용보증 총량지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불경기에 오

히려 은행의 대출기능이 경색되어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술하게 될 〈그림 9〉에서 명목 GDP 증가율 추이와 경상기준 신용보증증가율 추이를 보면 신용보증은 금융의 경기동행적 요소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악화시 신용보증 공급이 증가하여 경기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신용보증이 정상적인 추세선에서 이탈하였다가 이후 다시 정상적인 추세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증공급이 경기침체기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도 해왔음을 시사한다.

경기침체시 신용보증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팽창한 보증규모를 축소해 왔는데, 2008년

그림 8 GDP 대비 보증 비중 (2003-2009년, 일반보증 기준)



주: 2009년 수치의 경우 한국은 정부목표 순증액 기준 잠정치이며, 일본과 미국 역시 긴급 보증 순증예상액 기준임. 수치에 대한 세부내역은 황인국(2009)을 참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보증규모를 다시 늘리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한국 · 일본 · 미국은 2009년도에 보증확대를 통해 보증비율의 상승을 예정하고 있는데, 2009년도의 GDP 대비 보증비중은 한국이 7.0%, 일본이 9.6%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우 0.7%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액 대비 보증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12% 수준에 이를 전망으로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보증기관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보증 부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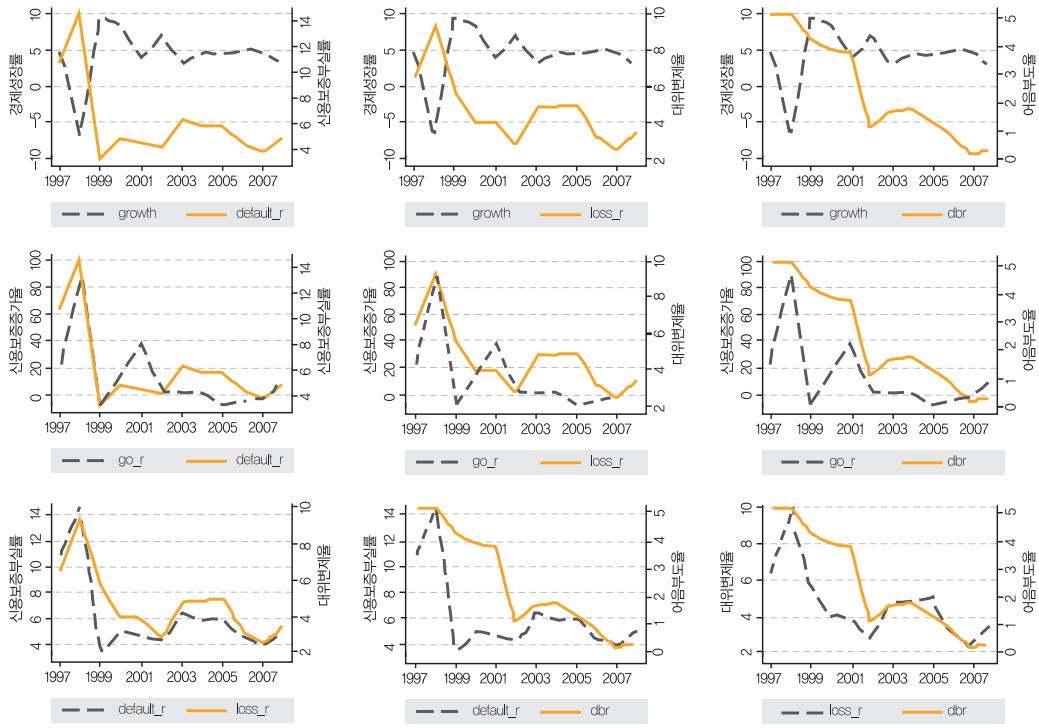
경기침체기 신용보증 공급의 증가는 한편으로 신용보증 수혜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나타내는 '부실률'(default rate)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부실률은 신용보증 공급실적과 함께 보증제도의 성과와 자산의 건전성 정도 및 '신용위험'(credit risk)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보증운용배수 등 보증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실률 측정을 위해 다양한 지표와 '산출방식'(업체수 기준 혹은 금액기준 등)이 사용되는데, '대위변제율'(loss rate)도 부실률 산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9〉를 중심으로 신용보증 부실률의 추이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률이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보증잔액의 감소와 경기호전,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부실률이 하락하였다. 부실률은 2005년 5.91%, 2006년 4.48%, 2007년 3.8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연평균 5.05%로 상승 반전하였다. 대위변제율 지표 역시 신용보증부실률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위변제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를 이어가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2009년에 보증운용배수 상승으로 향후에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 9〉를 보면 신용보증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잔액증가율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반대로 경제성장률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불경기에 신용보증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부실률의 증가가 수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 증가율과 금액기준 신용보증부실률, 대위변제율, 그리고 어음부도율 상호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추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의 부실률이

경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4)]

그림 9 경제성장률과 신용보증지표 증가율 비교



4) 실제 경제성장률과 각종 신용보증지표간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률	신용보증 잔액증가율	신용보증 부실률	대위 변제율	어음 부도율
경제성장률	1				
신용보증잔액증가율	−0.8056	1			
신용보증부실률	−0.8019	0.8051	1		
대위변제율	−0.6441	0.7027	0.8718	1	
어음부도율	−0.1962	0.6213	0.5922	0.7556	1

(3) 신용보증운용 현황

신용보증공급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2008년 금액기준 99.6%), 아래 〈표 3〉과 같이 자금용도에 있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위주의 지원으로 경기에 대응해 왔다.

표 3 자금용도별 중소기업 신용보증현황 (200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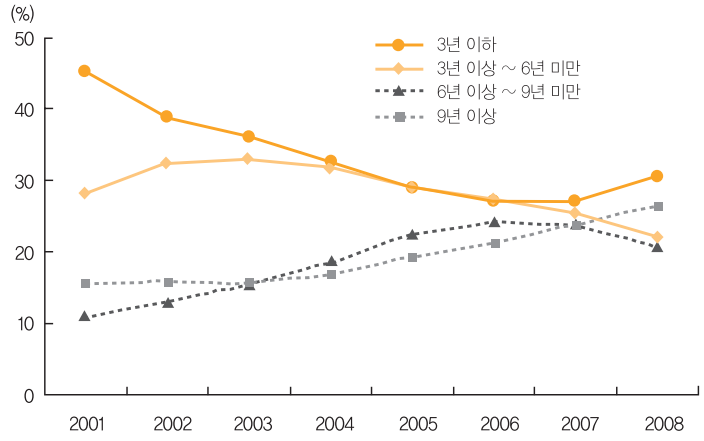
연도	중소기업 합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비율(%)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수 기준	금액 기준
2000	225,565	14,655,879	217,960	13,721,711	7,605	934,168	96.6	93.6
2001	253,453	17,751,597	246,657	16,772,446	6,796	979,151	97.3	94.5
2002[1)]	346,692	25,478,070	338,155	23,931,329	8,537	1,546,741	97.5	93.9
2003	353,553	28,236,357	344,544	26,076,646	9,009	2,159,711	97.5	92.4
2004	336,271	30,333,217	326,508	27,846,978	9,763	2,486,239	97.1	91.8
2005	299,068	28,993,196	289,233	26,527,715	9,835	2,465,481	96.7	91.5
2006	275,820	28,389,647	266,577	25,398,734	9,243	2,990,913	96.6	89.5
2007	254,444	28,440,524	245,755	25,129,388	8,689	3,311,236	96.6	88.4
2008	258,854	30,254,942	250,836	27,448,253	8,018	2,806,689	96.9	90.7

주 : 2002.4.1일자로 P-CBO 등 일부보증을 제외한 특별보증이 일반보증으로 전환됨

순보증이용기간별 보증잔액 비율 추이를 보면 〈그림 10〉과 같이 보증이용기간이 6년 미만인 보증잔액의 비중은 감소해 온 반면에 6년 이상인 보증의 비중은 증가하여 보증기간의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보증기간이 6년 이상인 보증규모가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4% 수준으로 이러한 보증기간의 장기화는 특정 기업에 대한 보증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기업이 계속 보증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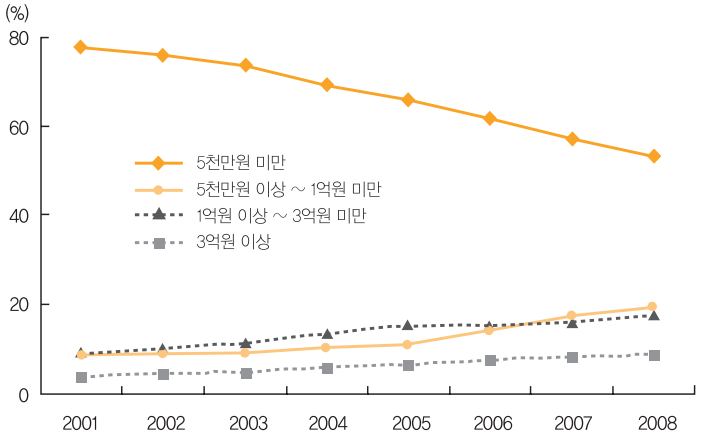
한편 신용보증금액은 자금용도, 업종별 특성,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는데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정책적 필요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기보증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차감하고 보증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보증신청 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 업종별 특성 및 신용도에 따라 연간매출액의 1/3-1/6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고, 1억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있다. 실제 보증금액별 보증건수(일반보증과 특별보증 합계 건수 기준) 실적 추이를 보면 〈그림 11〉

그림 10 순보증이용기간별 보증잔액 비율 (신용보증기금 직접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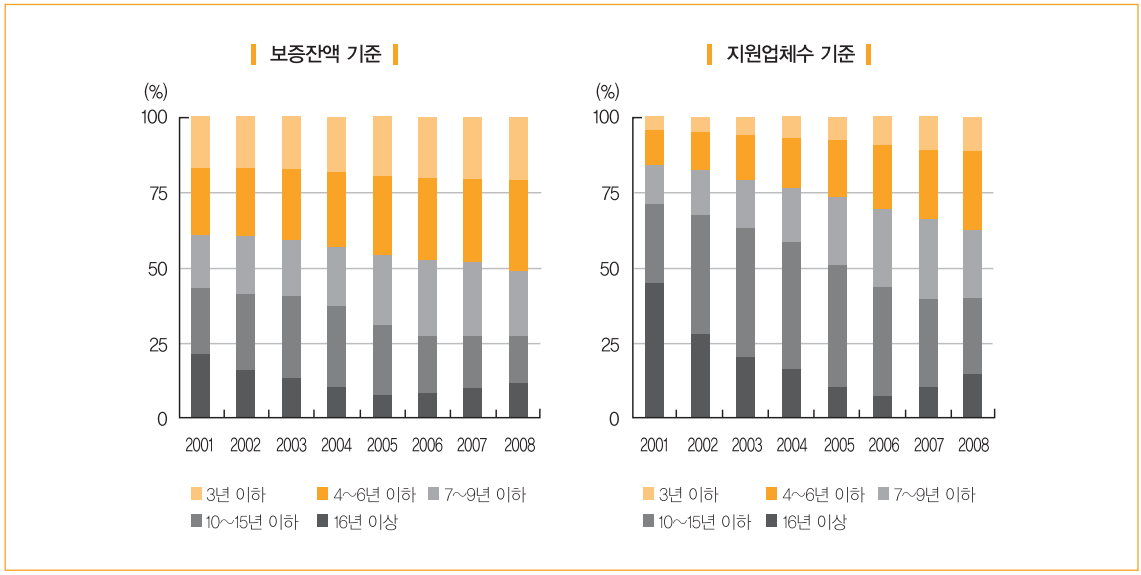
에서 보듯이 5천만원 미만 소액보증의 보증잔액 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나, 건수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현재 여전히 전체 보증건수의 53% 수준(약 9만 9천개사)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비율 (%)



업력별 신용보증규모를 보면 2007년 6월부터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BSS)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창업초기 기업을 포함한 업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감소해 온 반면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2008년 현재 업력 7년 이상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이 업체수 기준으로 59.9%(보증잔액 기준으로는 72.5%)에 달하며,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28.5%(보증잔액 기준으로는 21.7%)에 불과하다.

그림 12 신용보증의 업력별 지원기업 추이 (2001-2008년 직접분)



(4) 산업별 분석

신용보증잔액의 산업별 분류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GDP 분류와 일치하는 18개 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별 보증규모와 GDP 규모의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별 보증잔액 증가율과 GDP 증가율 패턴을 통해 발견되는 특징은 모든 산업에서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보증이 급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경기상승 국면에는 신용보증공급이 감소하고 경기하강 국면에는 신용보증공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보증잔액 증가율과 GDP 증가율 사이의 단순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농림어업 -0.464, 광

업 -0.243,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 -0.584, 섬유 및 가죽제품-0.575, 목재 · 종이 · 출판 · 인쇄 -0.695, 석유 · 석탄 · 화학제품 -0.321, 비금속광물제품 -0.873, 금속제품 -0.592, 산업용기계 -0.679, 전기전자기기 -0.187, 정밀기기 -0.659, 운수장비제조 -0.869, 가구 및 기타제조 -0.295,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0.609, 건설업 -0.1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193, 운수 · 창고 · 통신업-0.06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190 등으로 전 산업에서 負(-)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93-2008년간 18개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불변인 관측 불가능한 개별산업의 효과'(time-invariant industry-specific unobservable effects)와 시간더미 변수를 첨가하여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unobserved time-specific effects)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추정한 결과 식 (1)과 같이 1% 유의수준에서 산업별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상승)할 때 산업별 신용보증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4% 포인트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산업별로도 호경기에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증수요가 감소하여 신용보증 활동이 둔화되고, 불경기에는 보증수요가 증가하여 보증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text{산업별 신용보증증가율}_{i,t} = \underset{(1.956)}{14.236} - \underset{(0.212)}{1.411}\ \text{산업별 경제성장율}_{i,t} + \alpha_i + \delta_t \quad \cdots\cdots (1)$$

(여기서 i는 횡단면 산업, t는 시계열 연도 (t = 1993,....,2008), α_i는 관측되지 않는 산업개별 효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δ_t는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를 통제하는 시간더미 변수, ( )안은 표준오차)

물론 이상의 분석은 개별효과를 통제한 산업의 평균적인 반응 결과를 나타내며 개별 산업별로는 신용보증공급의 경기 대응적 속성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산업별로도 호경기에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증수요가 감소하여 신용보증

5) 산업별 신용보증방정식과 후술하게 될 지역별 신용보증방정식의 경우 가용한 통제변수의 한계로 인해 패널분석을 이용하였다. 즉 시간더미를 포함시켜 시간적으로는 변화하나 산업간에는 변하지 않는 정보를 통제하였으며,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산업개별적인 특성(횡단면 변량)을 제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 지역별 경제성장률 외에 다른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 계수가 참인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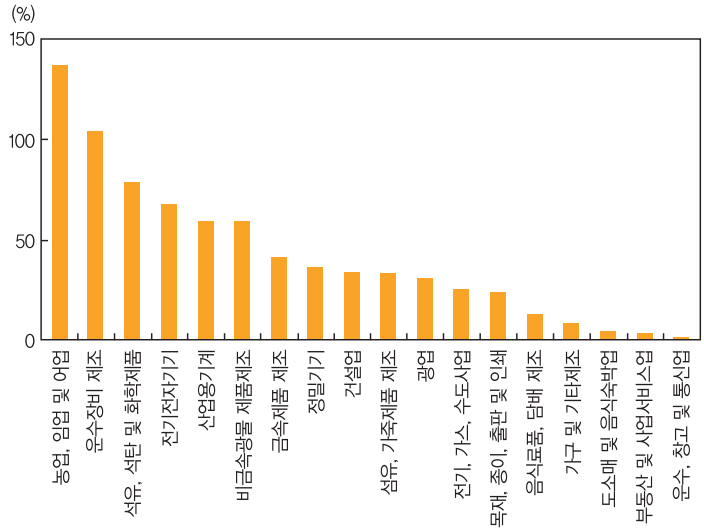
활동이 둔화되고, 불경기에는 보증수요가 증가하여 보증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표 4〉의 분석결과는 신용보증이 음식료품 · 담배제조, 섬유 · 가죽제품, 목재 · 종이 · 출판 · 인쇄, 비금속광물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산업연관표상에서 고용의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대하여 더욱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4 산업별 신용보증공급의 경기변동에 대한 특성

	해당산업의 GDP변동성 > 신용보증변동성	해당산업의 신용보증변동성 > GDP변동성
전산업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GDP비중 > 신용보증비중	석유 · 석탄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운수장비	농림어업 광업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전산업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신용보증변동성 > GDP변동성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정밀기기	음식료품 · 담배제조 섬유 · 가죽제품 목재 · 종이 · 출판 · 인쇄 비금속광물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한편 산업별 신용보증잔액을 정규화시키기 위해 해당 산업내의 중소기업체수(신용보증 수혜 및 미수혜기업 포함)로 나누어 단순 평균한 업체당 신용보증잔액(1993-2008년 평균)이 전산업 평균(3,930만원)을 상회하는 산업은 농림어업(1억 3,660만원), 운수장비(1억 430만원), 석유 · 석탄 · 화학(7,840만원), 전기 · 전자기기(6,780만원), 산업용기계(5,910만원), 비금속광물(5,860만원), 금속(4,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신용보증잔액이 전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산업으로는 정밀기기(3,630만원), 건설업(3,420만원), 섬유 · 가죽제품(3,310만원), 광업(3,110만원), 전기 · 가스 · 수도(2,520만원), 목재 · 종이 · 출판 · 인쇄(2,450만원), 음식료품 · 담배(1,280만원), 가구 및 기타제조(790만원), 도소매 · 음식숙박(480만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290만원), 운수 · 창고 · 통신업(1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산업별 업체당 보증잔액 (1993-2008년 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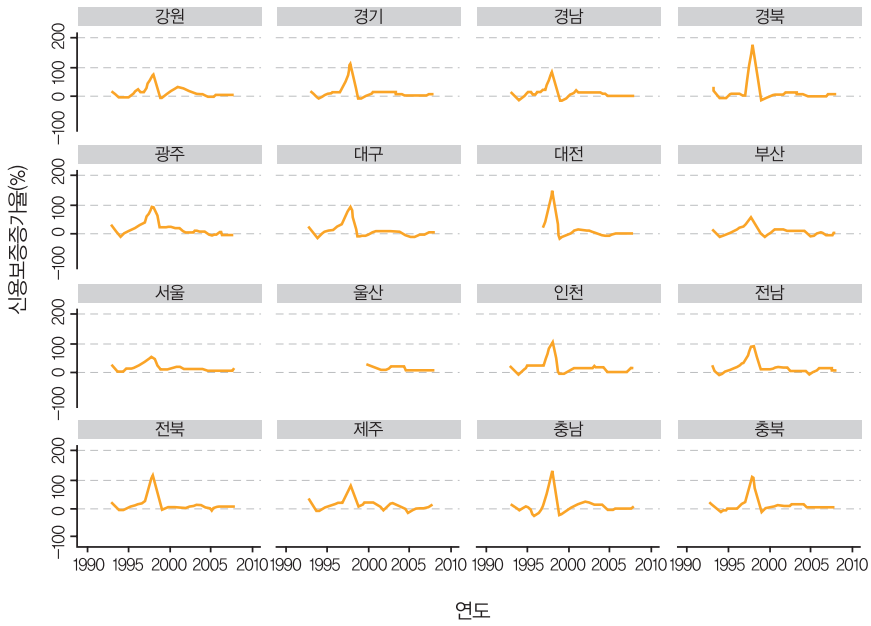


(5) 지역별 분석

16개 시도지역별 보증규모와 '지역총생산'(GRDP) 규모의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지역별 보증잔액 증가율과 GRDP 증가율 패턴을 통해 발견되는 특징은 산업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각 지역별로도 보증이 급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호경기에는 신용보증 활동이 둔화되고 불경기에는 보증수요가 증가하여 보증공급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산업별 패널자료 분석과 비교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993-2008년간 16개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불변인 관측 불가능한 개별지역의 효과'와 시간더미 변수를 첨가하여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 결과 식 (2)와 같이 1% 유의수준에서 지역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상승)할 때 지역의 신용보증증가율은 평균적으로 2.2% 포인트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간더미변수를 포함시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특성과 개별지역적인 특성이 통제된 결과이기는 하나 지역별 경제성장률 외에 다른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 계수가 참인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4 지역별 신용보증과 GRDP 증가율 비교 (1992–2008년)





$$\text{지역별 신용보증증가율}_{i,t} = \underset{(2.533)}{30.578} - \underset{(0.238)}{2.214}\text{지역 경제성장율}_{i,t} + \alpha_i + \delta_t \quad (2)$$

(여기서 i는 횡단면 산업, t는 시계열 연도 (t = 1993,....,2008), α_i는 관측되지 않는 산업개별 효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δ_t는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를 통제하는 시간더미 변수, ( )안은 표준오차)

한편 지역별 신용보증잔액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체수(신용보증 수혜 및 미수혜기업 포함)로 나누어 단순 평균한 업체당 신용보증잔액이 전국 평균(640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은 인천(1,050만원), 경기(990만원), 서울(760만원), 대구(720만원), 경남(690만원), 경북(680만원), 광주(670만원), 충남(6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충북(630만원), 대전(530만원), 울산(500만원), 전북(490만원), 부산(490만원), 전남(470만원), 제주(450만원), 강원(400만원)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림 15 지역별 업체당 평균보증잔액 추이 (1992-2008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업체 수뿐만 아니라 업체당 신용보증공급액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측면에 유리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다시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보증총량 규모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업체당 보증규모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 경남 · 경북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경기변동에 대응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

(1)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의 유용성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율 · 설비투자효율 ·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대기업보다 높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기침체기에 우려되는 생산성 저하를 완화시켜준다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며, 특히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은행의 건전성 경영기조 강화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약받는 금융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중소기업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낮추고 '위험분담'(risk sharing)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경기변동에 대응한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방안으로써 대표적인 정책금융인 신용보증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은 경기대응적 역할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공급이 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활성화 경로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많은 국내외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경기변동은 기업투자, 민간소비수요, 유동성 충격,

기술과 생산성의 변동 등 다양한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개별경제활동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음 단계로 그 영향이 파급되는 특성을 보이며 산업별 차이는 있으나 수요증가시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등의 파급경로에 의해 경기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바젤 II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하향조정(10%에서 0%로)되었기 때문에 보증의 대출효용성이 더욱 커졌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해 졌다. 신용보증 공급이 확대되면 은행의 신용리스크 부담이 완화되므로 신용보증을 기초로 BIS 비율 부담 없이 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무엇보다 신용보증의 장점은 일반은행 대출이 우량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비록 현재는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에 성장성 있는 기술 · 사업성 위주의 혁신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2) 정책금융공사의 출범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명목으로 '정책금융공사'(2009.6.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를 출범시킴에 따라 주어진 자금수요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종 지역기반 정책금융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수요에 부응하면서 시장기능을 보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이후 전개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출범 초기에는 조직 역량의 미비와 기존 정책금융 공급시장과의 마찰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을 통한 전대방식(on-lending) 위주로 자금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은행을 통한 전대방식 자금대출의 경우 재무상태가 우량한 중소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며, 이는 기존 정책금융기관 지원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관은 지금보다 재무적인 기준보다는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보증기업의 선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금융공사는 법률적으로 직접융자, 투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참조). 따라서 향후 각종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중복문제 제기 및 업무영역의 구체화 · 전문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책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고유의 영역을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선제적 ·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신용보증의 역할

신용보증의 역할은 상기에서 언급한 유용성을 극대화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중 ·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금융 공급자원의 확대에 대하여 정책금융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가. 경기침체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경기침체시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보증대상 기업 선정시에 고용 및 부가가치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시 이를 탄력적으로 감안함으로써 산업별 · 기업별 속성이 제대로 반영된 평가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과 보증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등보증을 고용 및 부가가치 효과 큰 산업부문(예: 도소매 및 음식 · 숙박, 건설업, 음식료품, 금속제품 등)까지 평가요소로 감안하여 보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신축이나 시설증설 등 설비투자에 대한 보증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능력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금용도에 있어 신용보증은 경기 싸이클에 관계없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위주의 지원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는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창업자금 · 기술개발자금 · 장기설비자금 등 금융시장실패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을 식별하여 현재의 재무구조는 다소 취약하더라도 기술력 있고 성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 신용보증의 공공성과 '품질보증' 기능 강화

우량 · 중견기업 위주의 보증이나 보증확대 기조에 편승하여 신청한 효과성 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배제하고 현재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구축하여 신용보증의 공공성과 '품질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의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경쟁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공적보증기능 확대 일환으로 2009년도에 수출기업(4조원) · 녹색성장기업(1조원) · 창업기업(7.5조원) 등 핵심분야에 12.5조원을 공급하여 경기회복에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표 5〉에서 보듯이 2009년 1/4분기 현재 신규보증공급 5.8조원 중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장산업 · 수출중소 · 유망서비스 · 설비투자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실적이 3.1조원에 달한다. 성장기반 확충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경기회복에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증한도 사정우대, 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보증우대제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주력 업종이 전자 · 전기 · 정보, 정밀기계 · 신공정, 재료 · 소재, 신물질 · 생물공학, 광학 · 의료기기, 항공기 · 수송, 환경 · 에너지 자원, 물류 · 유통, 지식 · 서비스, 첨단문화 · 컨텐츠, 저탄소 녹색분야(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청정연료,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탄소포집 및 저장, 에너지저장, 발광다이오드, 전력 IT 등) 등인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채널 기능을 하여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5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정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말
수출중소기업	•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기업 • 중기청 선정 유망수출기업 등	3.5	4.2	4.6	4.3	1.3
유망서비스업	•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	1.0	1.7	2.6	2.6	0.7
설비투자보증	• 고용창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2.3	2.9	3.0	2.6	0.4
고용창출기업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공정 자동화 및 시설증설기업	1.4	0.4	0.8	1.2	0.2
녹색성장기업	• 신규고용 확대(30% 이상) 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	–	–	–	0.5

다. 신용보증의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8년 6월 1.14%에서 2009년 2월에는 2.67%로 증가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어음부도율과 신용보증의 대위변제율 및 보증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잔액 대비 부실액 비율은 2008년말 현재 5.0% 수준이었으나, 2009년 3월 6.8%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시에도 보증 총량공급 확대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발생률이 최고 11%를 기록한 바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증부실률의 증가는 보증료율의 불가피한 인상과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의 상승(예: 보증수수료+대출금리 〉 담보대출금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증공급 확대로 인한 보증사고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신용보증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 · 구조조정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외 사용 기업에 대하여 제재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식매입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중 · 장기 신용보증 공급방안 마련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은 244개 선정 업종에 대해 보증공급 실적이 2006년 2.9조원, 2007년 3.7조원, 2008년 2.9조원, 2009년 3월말 현재 0.8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업체 수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같은 공적 금융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은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업체당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지역별 산업 특성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와 장기보증기업의 보증졸업제도 검토

간접금융 위주의 관계형 금융은 은행으로 하여금 축적된 기업 내부정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융위험도 높은 성장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6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SBSS)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력별 신용보증규모 추이를 보면 창업초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증가해 왔다. 업력이 긴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는 대위변제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 신용보증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의 축소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줄이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을 시장에 존속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증이용기간별 보증잔액 비율 추이를 보면 보증기간의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 번 보증을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보증의 수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현실적으로 보증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도와 자금의 성격을 고려한 공적 신용보증의 공급으로 상업금융의 시장실패 보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량기업에 대한 장기 · 거액의 보증보다는 보증상품의 기간이 짧더라도 혁신형기업과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증퇴출의 단계적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보증을 받아 어느 정도 경영안정(신용등급의 향상과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혜택에서 퇴출시키고 자립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바. 보증배분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보증의 역할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별 신용보증 증가율과 GDP 증가율간의 특성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신용보증기금이 한국경제 산업 각 부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보증배분 적정 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 of credit guarantee) 구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대응성을 강화하고 경기변동의 파급효과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자금용도별 신용보증 관리를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보증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 중복보증 문제의 해소 및 보증수요자 중심 행정의 강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시스템이 다소 미비하여 자금이나 보증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원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정책금융을 관장하는 단일의 행정체계가 부재하여 중복지원으로 인한 수혜대상 축소 등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관장하는 관련 기관간에 분산되어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자금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용보증의 경우 정책기관간 중복보증은 보증의 고액화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높은 부실률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복보증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5년 12월에 신보 · 기보 간 「업무특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양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비중이 2005년말 26.2% 수준에서 2009년 3월말 현재 6.6% 수준으로 감소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2009.2.12)에 따르면 일부 보증에 대하여 신 · 기보 복수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중복보증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이 시급한 2009년의 경우 대폭적인 보증확대 기조에 따라 보증업무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나 실무인력 변동은 없어 보증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9년 3월까지의 월평균 보증신청건수가 2008년 월평균 5,867건보다 2.7배나 증가한 16,030건에 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억원 이하 보증에 대한 자동심사시스템 도입으로 보증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 처리실적이 2009년 3월말까지 전체 보증취급건수(36,275건)의 17.4%에 불과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2007)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운영'(26.7%),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또는 폐지'(22.6%), '보증료 대폭인하'(19.3%),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심사비중 확대'(16.8%) 등의 순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증공급체계의 합리적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 정책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대처

정책금융공사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장실패 영역 및 정책금

융기관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전대방식에 의한 자금대출을 주된 업무 영역으로 출범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 중복 여지를 직접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반은행 대리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전대방식의 자금대출이 신용등급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며, 이는 기존 지원대상기업의 평균 업력과 종업원수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수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재무적인 기준보다는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보증기업의 선별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향후 법률에 의해 보증을 통한 정책자금의 운영을 도모할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중복문제 제기 및 업무영역 전문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정책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포괄범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역은 무엇이며, 또한 신용보증기금만이 기존의 업무 노하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무엇인지 등 보증업무의 전문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 금융감독원(2008), 「은행경영통계」.
- 김동환(2008), 「중소기업금융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 김현욱(2005),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27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pp. 45-87.
- 이종욱 · 남주하 · 오승현 · 노용환 · 김정렬 · 김상봉(2009),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와 정책적 보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2007), 「200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2008a), 「2008년도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중앙회(2008b), 「중소기업 경영지표」.
- 중소기업중앙회(2009), 「월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09. 3월 동향 및 4월 전망」, 조사통계팀.
- 중소기업청(2008), 「신용보증 · 보험제도안내」.
- 통계청(2007),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한국은행(2008), 「2007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2009a), 「2007년 산업연관표작성결과」, 2009.4.2.
- 한국은행(2009b), 「2009년 경제전망(수정)」, 2009.4.10.
- 황인국(2009), "주요국의 신용보증 관련 정책대응과 시사점", 「코딧리서치」, 313호, 신용보증기금, pp. 103-108.